

I. 미 국

□ FY2012 : 2011. 10~2012. 9

□ 출처 : Fiscal Year 2012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1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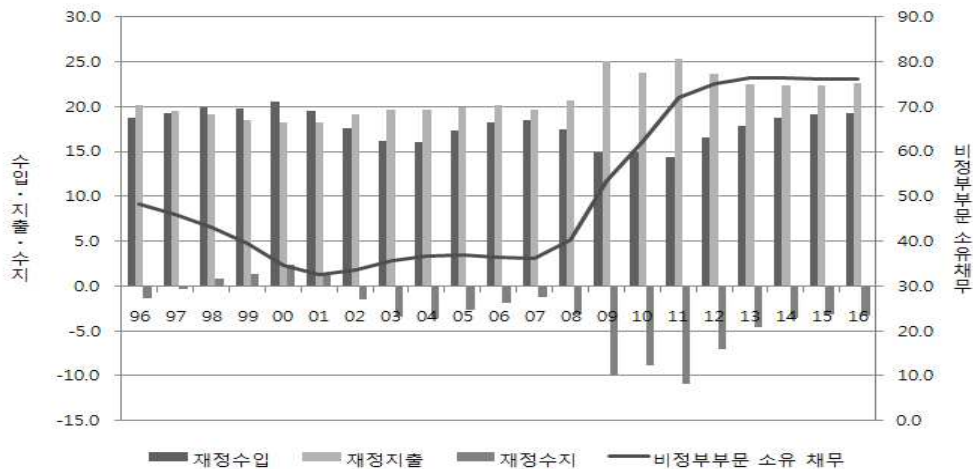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1 to 2021, CBO, 2011. 1

□ 환율(2010년 평균) : 1USD = 1,156.26원

□ 경제규모 : 2009년 경상GDP 14조 439억달러(우리나라의 10.6배)

[그림 1-1] FY2012 예산안 연방정부 재정수지 및 부채 전망

(단위: GDP 대비 %)



- 주: 1) 재정수입·재정지출·재정수지,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회계연도 기준
- 2)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debt held by the public):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을 의미하는 연방정부 공공채무(public debt)는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와 정부부문 소유 채무로 구성.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는 정부가 적자 보전을 위해 빌려오는 채무(누적개념)라는 의미에서 연방부채 판단시 유의미한 개념
- 3) 1996~2010년: 실적치

자료: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

— <요 약> —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09년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은 2011년과 2012년에도 지속될 전망
- (재정전망)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FY2012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33.1% 감소한 1조 1,010억달러 전망

◇ 예산기조: 교육, R&D 투자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와 더불어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정책 추구

- ①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 ② 재정건전화

◇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FY2012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20.9% 증가한 2조 6,274억달러(GDP의 16.6%) 전망
- 총 3조 7,290억달러 규모의 FY2012 예산안은 경제성장과 미래 경쟁력을 제고시킬 교육, 산업, 인프라 분야에는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제외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재정적자 삭감을 위한 고통분담

◇ 주요 재정정책

- 국가경쟁력 제고
 - 교육, 산업,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분야에 지출 확대
- 재정건전화
 - 비안보 재량지출 및 공무원 임금 동결, 재정사업 통폐합, 국방지출 삭감과 함께 세제개혁, 신속재원폐지 등 예산제도 개혁을 제안
- 복지지출 관리 정책
 - FY2012 예산안에서는 복지지출 개혁의 필요성은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음
 - 다만,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저소득층 냉난방비 보조사업, 지역개발 포괄보조금 등을 삭감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09. 2월	경기부양법(ARRA) 발효	재정동향 1호
2009. 2월	FY2010 예산안 발표	
2009. 5월	FY2010 예산안 업데이트 발표	
2009. 10월	FY2009 결산 발표	
2010. 2월	FY2011 예산안 발표	재정동향 2호
2010. 2월	재정위원회 설립	
2010. 2월	PAYGO법 발효	
2010. 3월	의료보험 개혁법 발효	재정동향 3호
2010. 6월	의회예산처(CBO)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발표	
2010. 10월	FY2010 결산 발표	재정동향 4호
2010. 11월	연준(Fed)의 6천억달러 양적완화 조치 발표	
2010. 12월	재정위원회 보고서 발표	재정동향 5호
2010. 12월	2010 감세연장법 발효	
2011. 1월	의회예산처(CBO) 경제 및 재정전망 보고서 발표	
2011. 2월	FY2012 예산안 발표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²⁾

- (경제성장) 2009년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은 2011년과 2012년에도 지속될 전망
 - 최근 있었던 일시적인 사회보장세 인하와 실업급여 연장, 연준의 양적완화 조치 등은 2011년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12~2014년에는 노동시장과 투자가 회복 되면서 평균 4.1%의 GDP 성장률을 보일 전망

- 경제성장에 따라 실업률이 감소하겠으나 그 속도는 완만할 전망이며, 안정적인 물가와 예년보다 낮은 금리 예상
 - (실업률)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실업률은 점차 감소하겠으나, 2015년 이후에나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
 - (물가) 높은 실업률로 인해 물가수준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측
 - (금리) 금융시장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섬에 따라 금리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
 -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이 낮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

2) 미국의 경제전망 부분에서 표시된 연도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나타내고, 그 이외의 부분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미국의 회계연도를 의미

<표 1-1> FY2012 예산안 경제전망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실질 GDP ¹⁾	2.7	2.7	3.6	4.4	4.3	3.8	3.3	2.9	2.6	2.5	2.5	2.5
CPI(CPI-U) ¹⁾	1.6	1.3	1.8	1.9	2.0	2.0	2.1	2.1	2.1	2.1	2.1	2.1
실업률 ²⁾	9.6	9.3	8.6	7.5	6.6	5.9	5.5	5.3	5.3	5.3	5.3	5.3
금리												
국채 91일물 ³⁾	0.1	0.2	1.0	2.6	3.7	4.0	4.1	4.1	4.1	4.1	4.1	4.1
국채 10년물	3.2	3.0	3.6	4.2	4.6	5.0	5.2	5.3	5.3	5.3	5.3	5.3

주: 1) 전년 대비 변화율

2) 연평균

3) 평균 수익률, 유통시장(은행 할인 기준)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2, OMB, 2011. 2

나. 재정전망

□ **(재정수입)**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소득 및 기업이윤 증가로 재정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FY2011 재정수입은 지난 12월 제정된 감세연장법³⁾으로 인해 FY2010보다 0.5% 증가한 2조 1,737억달러(GDP의 14.4%)에 그칠 전망
- FY2012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20.9% 증가한 2조 6,274억달러(GDP의 16.6%) 전망
- 이후 FY2013~FY2021 기간 동안 재정수입은 연평균 6.4%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재정지출)** 향후 10년간 약 1조 1천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겠다는 이번 예산안 제안의 2/3를 지출삭감으로 달성

- * 해외진비 등 안보지출 절감분을 제외한 금액
- 현재 진행중인 FY2011에는 안보 및 비안보 재량지출 증가(290억달러)와 법정지출 증가(180억달러) 등 전년 대비 10.5% 증가한 3조 8,190억달러 전망

3) 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

- FY2012는 전년 대비 2.4% 감소한 3조 7,290억달러 전망
 - 경기부양 및 실업급여 지출의 대폭 감소와 재정건전화 정책 시행으로 지출이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
- FY2013~FY2021 기간 동안 재정지출은 연평균 5.3%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재정수지)**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약 2조 1,820억달러의 재정적자가 감소할 전망

- 이번 예산안에서 제안한 5년간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 등 재정건전화 방침으로 향후 10년간 1조1,110억달러(안보지출 절감분 제외)의 적자 감소 예상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전비를 포함한 안보지출 절감분(1조 900억달러)을 포함하면 FY2012-FY2021의 재정적자 절감분은 총 2조 1,820억달러에 달할 전망

□ **(국가채무)** 향후 재정적자가 감소할 전망을 기반으로 적자보전을 위한 재원조달 규모는 감소할 전망이나, 국가채무는 증가할 전망

- FY2011의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는 10조 8,560억달러로 GDP 대비 72.0%, FY2012에는 11조 8,810억달러로 GDP의 75.1%에 이를 전망
- FY2013~FY2021 기간 동안 국가채무는 연평균 5.1%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참고1>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debt held by the public)

채무부가 발행한 채권을 의미하는 연방정부 공공채무(public debt)는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와 정부부문 소유 채무로 구성.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는 정부가 적자 보전을 위해 빌려오는 채무(누적개념)라는 의미에서 연방부채 판단시 유의미한 개념

<표 1-2> FY2012 예산안 재정전망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총량(십억달러)											
수입	2,174	2,627	3,003	3,333	3,583	3,819	4,042	4,257	4,473	4,686	4,923
지출	3,819	3,729	3,771	3,977	4,190	4,468	4,669	4,876	5,154	5,422	5,697
재정적자	1,645	1,101	768	645	607	649	627	619	681	735	774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10,856	11,881	12,784	13,562	14,301	15,064	15,795	16,513	17,284	18,103	18,967
예산총량(GDP 대비 %)											
수입	14.4	16.6	17.9	18.7	19.1	19.3	19.5	19.6	19.8	19.9	20.0
지출	25.3	23.6	22.5	22.4	22.3	22.6	22.5	22.5	22.8	23.0	23.1
재정적자	10.9	7.0	4.6	3.6	3.2	3.3	3.0	2.9	3.0	3.1	3.1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72.0	75.1	76.3	76.3	76.1	76.1	76.1	76.2	76.4	76.7	77.0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2, OMB, 2011. 2

<참고 2> CBO 경제 및 재정전망(2011년 1월)

□ (경제전망) 경기부양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는 있지만 당분간 경제성장과 고용은 최근 수년간의 잠재수준을 밑돌 전망

- 기업투자 및 순수출 증가와 함께 소비자 지출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며 작년 12월 감세조치 연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개선될 전망
- 투자지출의 증가에 힘입어 실질 GDP가 증가하여 아웃풋 갭(output gap)은 2016년 전반기에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2017~2021년에는 잠재GDP 성장률과 동일한 비율로 실질 GDP 성장

경제전망

(단위: %)

	2010	2011	2012	2013-2016 평균	2017-2021 평균
실질 GDP ¹⁾	2.5	3.1	2.8	3.4	2.4
CPI-U ¹⁾	1.2 ⁴⁾	1.3	1.3	2.0	2.3
실업률 ²⁾	9.6 ⁴⁾	9.2	8.2	5.3 ⁵⁾	5.2 ⁶⁾
금리 ³⁾					
국채 91일물	0.1 ⁴⁾	0.3	1.1	3.6	4.4
국채 10년물	3.2 ⁴⁾	3.4	3.8	4.7	5.4

주: 1) 전년 4/4분기 대비 변화율 2) 4/4분기
 3) 연평균 4) 2010년 확정치
 5) 2016년 전망치 6) 2021년 전망치

자료: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1 to 2021, CBO, 2011. 1

□ (재정전망) 경제성장과 더불어 실업급여 연장 등 일몰조항이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FY2011 이후 재정적자는 현저히 감소할 전망

- 다만, FY2011에는 작년 12월 감세조치 연장 등이 세입증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경기회복으로 줄어든 세출을 초과하는 지출증가로 재정수지는 전년보다 악화될 전망

재정전망¹⁾

(단위: GDP 대비 %)

	2010 ²⁾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재정수입	14.9	14.8	16.3	18.8	19.9	20.1	20.0	20.3	20.4	20.5	20.7	20.8
재정지출	23.8	24.7	23.3	23.1	23.0	23.1	23.5	23.4	23.3	23.7	23.9	24.0
재정수지	-8.9	-9.8	-7.0	-4.3	-3.1	-3.0	-3.4	-3.1	-2.9	-3.2	-3.2	-3.2

주: 1) 현재의 정책 유지를 가정

2) 확정치

자료: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1 to 2021, CBO, 2011. 1

2. 예산기조

※ 예산기조의 자세한 내용은 IV장 주요 재정정책 참조

교육, R&D 투자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와 더불어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정책 추구

- ①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 ② 재정건전화

총 3조 7,290억달러 규모의 이번 예산안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와 **재정적자 감축**에 주안점으로 두고 작성

- 교육, 산업,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분야에 지출 확대
- 재정건전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1조 1천억달러(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전비를 포함한 안보지출 절감분 제외)의 재정적자 절감

(국가경쟁력 제고)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에서도 경제성장과 미래 경쟁력을 제고시킬 분야에는 예산을 확대 배정

- **(교육)** Pell Grant 장학금 최대 수혜액 5,550달러를 지속 유지, 향후 10년간 십만명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사 양성 등 지원
- **(산업)**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연구개발 일반과 생의학 연구 지원, R&D 세액공제의 단순화, 범위확대, 영구화 등 제안
- **(인프라)** 도로, 교량, 고속철도, 건물,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등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는 인프라 개선에 투자

- **(재정건전화)**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분야를 제외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재정적자 삭감을 위한 고통분담
 - **(세출측면)** 5년간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 200여개의 재정사업 종료 및 삭감, 향후 5년간 국방비 지출 계획에서 780억달러 삭감 등
 - **(세입측면)** 지난 12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정책과 유산세 기한대로 종료, 대체최저한세(AMT)를 2014년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되, 고소득자에 대해 항목별 공제한도를 28%로 제한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FY2012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20.9% 증가한 2조 6,274억달러(GDP의 16.6%) 전망
 -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소득 및 기업이윤의 증가로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급여세(payroll tax), 개인소득세, 법인세 증가 전망
 - 다만, 현재 진행중인 FY2011 재정수입은 지난 12월 제정된 감세연장법으로 인해 FY2010보다 0.5% 증가한 2조 1,737억달러(GDP의 14.4%)에 그칠 전망

<표 1-3> 분야별 세입전망

(단위: 10억달러)

구분	2010 ¹⁾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재량지출 프로그램:												
안보	815	908	884	819	808	818	829	845	863	880	897	914
비안보	491	507	456	423	412	402	408	413	426	434	449	453
재량지출 프로그램 합계												
	1,306	1,416	1,340	1,243	1,220	1,220	1,237	1,258	1,289	1,314	1,346	1,367
법정지출 프로그램:												
사회보장	701	742	761	802	846	894	945	1,002	1,062	1,126	1,196	1,269
메디케어	446	488	485	528	557	582	631	650	672	732	785	840
메디케이드	273	276	269	288	352	391	427	457	488	522	557	595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110	-28	13	10	5	4	2	1	*	*	*
기타 법정지출 프로그램	644	716	612	573	570	596	654	665	671	709	736	771
법정지출 프로그램 합계												
	1,954	2,194	2,140	2,199	2,331	2,467	2,659	2,774	2,892	3,090	3,273	3,475
순이자(Net interest)												
	196	207	242	321	418	494	562	627	685	741	793	844
재해복구 및 구호 비용 ¹⁾												
	2	6	8	8	9	10	10	10	10	10	10
총 재정지출												
	3,456	3,819	3,729	3,771	3,977	4,190	4,468	4,669	4,876	5,154	5,422	5,697
GDP 대비 %												
	23.8	25.3	23.6	22.5	22.4	22.3	22.6	22.5	22.5	22.8	23.0	23.1

주: 1) 확정치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2, OMB, 2011. 2

□ FY2012 주요 세제개편안

- 중산층에 대한 감세정책을 영구화하고 지난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였던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정책과 유산세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
- 연소득 25만달러(부부합산)/20만달러(독신)의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정책을 2012년 이후에는 폐지
- 유산세는 일몰종료 후 2009년 수준인 최고세율 45%, 면세한도 350만 달러 회복

<표 1-4> 유산세 연도별 공제한도 및 최고세율

(단위: 백만달러,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면세한도	1	1	1.5	1.5	2	2	2	3.5	- ¹⁾	5	5
최고세율	50	49	48	47	46	45	45	45	0	35	35

주: 1) 유산세 폐지

- 대체최저한세(AMT)를 2014년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되, 고소득층(부부합산: 25만 달러, 독신: 20만 달러)에 대해 항목별 공제한도를 최대 28%로 제한
- 조세 체계 단순화, 법인세율 인하 등 법인세 개혁 제안
- 대형 금융기관의 과도한 레버리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책임금 부과
 -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에 금융위기책임금을 부과하여 향후 10년간 약 300억달러 징수

나. 분야별 예산

□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와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선택과 집중'에 충실한 예산안 편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IV장 주요 재정정책 참조

- 경제성장과 미래 경쟁력을 제고시킬 교육, 산업, 인프라 분야에는 투자확대

-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분야를 제외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재정적자 삭감을 위한 고통분담

□ **(교육)** FY2012의 교육부 재량지출 재원이 774억달러로 FY2010 확정치에 비해 20.7% 증가

- FY2012 교육부 예산 증가의 대부분은 FY2010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Pell Grant 프로그램에 기인
- 교육개혁 프로그램인 “최고를 향한 경주(Race to the Top)”*에 9억달러 배정
 - * 연간 교육 예산의 1퍼센트 남짓한 재원으로 40개 주 이상에서 교사와 학생의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달성한 프로그램

□ **(R&D)** 이번 예산안에서는 운영 및 시설과 장비 비용을 포함하여 R&D 예산에 1,480억 달러 배정

- 이와 더불어 민간의 R&D 투자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연구 및 실험 세액공제(R&E tax credit)를 확대개편, 단순화, 영구화 할 것을 제안

□ **(교통·통신)** 육상교통, 초고속 인터넷 보급 등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는 인프라 개선에 투자

- 향후 25년 내에 전 국민의 80%가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FY2012에 80억달러, 6년간 530억달러를 배정
- 초고속 무선 인터넷 보급률을 98%까지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찰, 소방당국 등 공공안전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
 - 이에 대한 재원은 주과수 경매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10년간 270억달러의 경매수익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재정적자 감축)** 이번 예산안의 포커스가 재정건전화에 맞추어 지면서 연방기관의 절반 정도가 FY2010 확정 예산보다 예산이 감소하고 국방, 환경 등의 예산도 대폭 삭감
- 200 여개의 재정사업 종료 및 삭감을 통해 FY2012에만 총 330억달러의 예산절감 계획
 - 향후 5년간 국방비 지출 계획에서 780억달러 삭감
 -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FY2012 재량지출 재원은 약 90억달러로 FY2010 확정치보다 12.7% 감소

<표 1-5> 분야별 지출전망

(단위: 10억 달러)

구분	2010 ¹⁾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재량지출 프로그램:												
안보	815	908	884	819	808	818	829	845	863	880	897	914
비안보	491	507	456	423	412	402	408	413	426	434	449	453
재량지출 프로그램 합계	1,306	1,416	1,340	1,243	1,220	1,220	1,237	1,258	1,289	1,314	1,346	1,367
법정지출 프로그램:												
사회보장	701	742	761	802	846	894	945	1,002	1,062	1,126	1,196	1,269
메디케어	446	488	485	528	557	582	631	650	672	732	785	840
메디케이드	273	276	269	288	352	391	427	457	488	522	557	595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110	-28	13	10	5	4	2	1	*	*	*
기타 법정지출 프로그램	644	716	612	573	570	596	654	665	671	709	736	771
법정지출 프로그램 합계	1,954	2,194	2,140	2,199	2,331	2,467	2,659	2,774	2,892	3,090	3,273	3,475
순이자(Net interest)	196	207	242	321	418	494	562	627	685	741	793	844
재해복구 및 구호 비용 ¹⁾	2	6	8	8	9	10	10	10	10	10	10
총 재정지출	3,456	3,819	3,729	3,771	3,977	4,190	4,468	4,669	4,876	5,154	5,422	5,697
GDP 대비 %	23.8	25.3	23.6	22.5	22.4	22.3	22.6	22.5	22.5	22.8	23.0	23.1

* 5억달러 이하

주: 1) 이 금액은 연방정부의 재해복구 및 구호 비용에 대한 잠정 배정액. 이와 같은 지원은 재량 지출이나 법정지출, 세금감면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나 편의상 지출에 포함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2, OMB, 2011. 2

<표 1-6> 기관별 재량지출 예산권한

(단위: 10억달러)

	2010 승인	2011 요청	2012 요청	Outyears			
				2013	2014	2015	2016
기관별 재량지출 재원:							
안보기관:							
Defenses	530.1	549.1	553.0	570.7	586.4	598.2	610.6
Energy -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s	9.9	11.2	11.7	12.0	12.5	13.0	13.3
Homeland Security	39.8	43.6	43.2	43.6	44.1	45.5	46.9
Veterans Affairs	53.1	57.0	58.8	60.7	62.6	64.6	66.7
State and Other Int'l Programs	49.8	53.1	52.7	54.3	55.8	57.0	58.1
안보기관 합계	682.8	714.0	719.4	741.3	761.4	778.2	795.6
비안보 기관:							
Agriculture	25.1	23.8	22.0	22.9	22.9	23.0	23.5
Commerce	13.9	9.0	8.8	8.7	8.7	8.9	9.3
<i>Census Bureau</i>	<i>7.2</i>	<i>1.3</i>	<i>1.0</i>	<i>1.2</i>	<i>1.2</i>	<i>1.4</i>	<i>1.6</i>
Education	64.3	72.9	77.4	75.4	75.2	75.5	76.8
Energy (excluding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16.6	17.1	17.8	18.1	18.0	18.1	18.5
Health and Human Services	84.4	83.4	82.2	79.4	79.1	79.6	81.4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42.8	41.6	41.7	41.1	41.4	41.2	41.9
Interior	12.1	12.1	12.1	11.7	11.6	11.7	12.0
Justice	27.6	24.1	20.9	27.3	27.2	27.4	28.0
Labor	13.5	14.0	12.8	12.5	12.4	12.5	12.7
State and Other Int'l Programs	0.1	0.1	0.1	0.1	0.1	0.1	0.1
Transportation	14.7	14.0	13.4	13.6	13.6	13.6	14.0
Treasury	13.4	13.9	14.0	15.0	15.6	16.2	17.1
Corps of Engineers	5.5	4.9	4.6	4.3	4.3	4.3	4.4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0.3	10.0	9.0	8.7	8.7	8.7	8.9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0.4	0.7	0.6	0.6	0.6	0.6	0.6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18.7	18.9	18.7	18.0	18.0	18.1	18.5
National Science Foundation	6.9	7.4	7.8	7.5	7.5	7.5	7.7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0.8	1.0	1.0	0.9	0.9	0.9	0.9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	9.3	10.1	10.2	10.0	10.2	10.4	10.7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1.2	1.4	1.3	1.2	1.2	1.2	1.2
Other Agencies	19.9	20.7	20.3	19.6	19.5	17.0	17.8
비안보 재량지출 예산권한 합계	401.6	401.2	396.8	396.7	396.6	396.7	406.0

<표 1-6>의 계속

(단위: 10억달러)

	2010 승인	2011 요청	2012 요청	Outyears			
				2013	2014	2015	2016
기타 재량지출 재원:							
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	167.3	164.7	126.5	50.0	50.0	50.0	50.0
Defense	162.3	159.1	117.6
Homeland Security	0.2	0.3	0.3
Justice	0.1
State and Other Int'l Programs	4.7	5.4	8.7
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 Outyears	50.0	50.0	50.0	50.0
기타 추경 승인액 / 긴급자금	8.3	...	-*
Agriculture	0.6
Defense	-1.6
Education	-0.1
Health and Human Services	0.2
Homeland Security	5.5
Justice	0.2
State and Other Int'l Programs	2.3
Corps of Engineers	0.2	...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1.0
Other Agencies	0.1
경기부양법(ARRA)	-2.4
Commerce	-0.5
Defense	-0.3
Energy	-1.5
Other Agencies	-0.1
재량지출 예산권한 총합	1,257.6	1,279.9	1,242.7	1,188.0	1,208.0	1,224.9	1,251.6

* 5천만달러 이하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2, OMB, 2011. 2

4. 주요 재정정책

□ 총 3조 7,290억달러 규모의 이번 예산안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와 재정적자 감축에 주안점으로 두고 작성

가. 국가경쟁력 제고

- **(교육)** 미국의 학교 교육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
 - 미국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학비지원금인 Pell Grant 장학금 최대 수혜액 5,550달러를 지속 유지
 - 향후 10년간 10만명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사 양성, 이 중 만명은 앞으로 2년 동안 모집할 계획
 - 교육개혁 프로그램인 “최고를 향한 경주(Race to the Top)”의 경쟁방식을 유아교육, 대학교육 등에 확대

- **(산업)**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연구개발 지원, 세액공제 개선
 - FY2012 R&D 분야 예산으로 1,480억달러 배정
 - 생의학 연구 등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 320억달러 배정
 - 2015년까지 백만대의 전기자동차 생산, 2035년까지 현재 전력 소비량의 두 배를 청정에너지로 충당, 2020년까지 건물 에너지 소비량 20% 감축 목표를 위한 지원
 - 이를 위해 석유, 가스, 석탄회사에 부여하는 세제혜택을 폐지하여 향후 10년간 460억달러 조달
 - R&D 세액공제의 단순화, 범위확대, 영구화 제안
 - 20개 경제성장지구(Economic Growth Zone)를 설정하여 경제적으로 침체된 지역에 투자와 고용증진을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

□ (인프라) 도로, 교량, 고속철도, 건물,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등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는 인프라 개선에 투자

- 향후 25년 내에 전 국민의 80%가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FY2012에 80억달러, 6년간 530억달러를 배정
- 초고속 무선 인터넷 보급률을 98%까지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찰, 소방당국 등 공공안전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
 - 이에 대한 재원은 주과수 경매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10년간 270억달러의 경매수익이 있을 것으로 전망
 - 동 수익금으로 공공안전 네트워크에 100억달러, 낙후지역 초고속 인터넷 보급에 50억달러, 기타 사업에 30억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적자감축에 사용

나. 재정건전화

□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 5년간 비안보 재량지출을 동결(FY2015까지)하여 향후 10년 동안 4천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

- FY2011 예산안에서 3년간의 실시를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예산안에서 5년으로 기한을 늘려 다시 제안한 것으로 기준은 의회 의결된 FY2010 예산

<표 1-7> 비안보 재량지출 5년간 동결(FY2015까지) 효과

(단위: 10억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2-16	12-21
12	-6	-20	-33	-47	-47	-50	-48	-51	-48	-57	-153	-406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2, OMB, 2011. 2

- **(공무원 임금 동결)** FY2011와 FY2012의 공무원 임금을 2년간 동결
 - 남은 FY2011 동안 공무원 임금 동결로 20억달러의 예산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280억달러, 향후 10년간 600억달러 이상 절감 예상

- **(재정사업 통폐합)** 200여개의 재정사업 종료 및 삭감을 통해 FY2012에만 총 330억달러의 예산절감 계획
 -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2년 동안의 예산안에서 매년 200억달러에 이르는 120여개의 재정사업 종료 및 삭감 방안을 제안
 - 이번 예산안의 재정사업 통폐합 방안으로 연방기관의 절반정도가 FY2010 확정 예산보다 예산 감소

- **(국방지출 삭감)** 향후 5년간 국방비 지출 계획에서 780억달러 삭감
 -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비를 포함하여 FY2012 전반적인 국방지출은 전 회계연도 요청액보다 5.3% 하락

<표 1-8> 향후 5년간 국방지출 삭감 내역

(단위: 10억달러)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13	-11	-11	-18	-24	-78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2, OMB, 2011. 2

- **(세계개편)** 법인세 개혁 및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연장 불가 방침 등으로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 도모
 - 25년만에 처음으로 적자중립적인 법인세 인하를 제안
 - 현행 최대 35%인 법인세율 인하를 제안하였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음
 - 대신 과거 예산안에서 제안한바 있는 미국계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

와 조세회피 방지로 FY2012에 77억달러, 향후 10년간 1,292억달러의 세수증대 효과 기대

-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였던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정책과 유산세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
 - 연소득 25만달러(부부합산)/20만달러(독신)의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정책을 2012년 이후 폐지
 - 유산세는 일몰종료 후 2009년 수준인 최고세율 45%, 면세한도 350만 달러 회복
- 대체최저한세(AMT)를 2014년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되, 고소득층(부부합산: 25만달러, 독신: 20만달러)에 대해 항목별 공제한도를 최대 28%로 제한

□ (기타) 신속재원폐지(expedited rescission) 규정, 복지지출 부정수령 및 세원의 투명한 조달을 위한 투자를 제안

- 작년 예산안에 이어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재원의 취소를 제안할 수 있는 신속 재원폐지(expedited rescission)를 제의
- 국가재원의 부당수취를 방지하고 세원의 투명한 조달을 위해 지난 두 번의 오바마 행정부 예산안에 이어 이번 예산안에서도 다음 4개 분야에 증액 지원
 - 사회보장국(SSA)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여 Continuing Disability Reviews(지속적인 신체장애상태 재심사)와 SSI(생활보조금)의 재판정에 지원
 - 의료보험 부정수령 및 남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실업급여 부당수령 감소
 - 국세청(IRS)을 통한 세법집행 강화

<참고> 2009~2010년 미국 정부가 수행한 재정건전화 조치

날짜	주요 내용	출처
2009. 2월	- 「FY2010 예산안」: 복지사업 등의 부정수급 방지, 납세 성실성 제고를 위해 추가재원을 배정하여 예산절감 및 추가세수 창출을 제안	재정동향 1호
2009. 5월	- 「FY2010 예산안」(업데이트): 지출효율화를 위해 비효율적 사업, 목표달성이 부진한 사업 등을 선정하여 해당사업을 종료 또는 삭감하는 방안 발표	
2010. 2월	- 「FY2011 예산안」: 재정건전화를 위한 다수의 정책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위원회 설립) 예산안 마련 당시 의회의 재정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안을 지지하고 있었으나, 상원 부결이후 2010년 2월 대통령령으로 재정위원회 설립 ·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 3년간 비안보 재량지출 증가 억제 · (재정사업 운영개선) 복지사업의 부정수급 등 국가재원의 부당수취를 방지하고 세원의 투명한 조달을 위해 FY2010 예산안에 이어 제안 · (PAYGO 원칙 적용) 예산안 작성 당시 의회에서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았으나 2010년 2월 대통령 서명을 마치고 효력 발생 · (신속재원폐지 규정 제안)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재원의 취소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제의 · (지출효율화) 비효율적 사업, 목표달성이 부진한 사업 등을 선정하여 해당사업을 종료 또는 삭감하는 방안을 FY2010 예산안에 이어 FY2011 예산안에서도 발표 	재정동향 2호
2010. 5월	- 신속재원폐지 절차 수립 법안 의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Y2011 예산안에서 제시하였던 신속재원폐지 방안에 대해 정부입법안 제출 	재정동향 3호
2010. 7월	- 정부계약 관행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성과 발표	
2010. 7월	-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Improper Payments Elimination and Recovery Act 발표	재정동향 4호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동향』 제1~4호 참조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 FY2012 예산안에서는 복지지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의료부문의 메디케어 의료수가 하락 방지 한시법 2년 연장이나 연금개혁 방향은 재정적자 감소 노력과는 다소 거리감 존재

- **(의료)** 메디케어 의료수가 하락을 방지하는 한시법을 향후 2년간 연장
 - 이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해 예산안에서는 예산삭감으로 620억달러를 마련하고 이에 더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부정수급 방지를 강화

- **(연금)**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방향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연금급여 삭감과 같은 조치에는 반대하는 입장 표명
 -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제도강화와 장기 급여 지불능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되, 민영화나 미래세대의 급여 삭감, 현 연금수급자의 급여 삭감에는 반대
 - 취약계층의 노후 생활 보장 및 장애인과 유족의 연금급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 **(기타)**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한 주요 복지지출
 - 저소득층 냉난방비 보조사업 예산을 FY2010 확정치의 절반수준으로 삭감한 25억 7천만달러로 배정
 - 지역개발 포괄보조금⁴⁾에 현 수준에서 7.5% 감소한 37억달러 배정 등

4)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CDBG)

<참고 3> 미 정부의 복지지출 개혁 정책(안)

□ (의료) 2010년 3월 발효된 의료보험 개혁법은 최근의 의회예산처(CBO) 추정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2천억달러, 향후 20년 동안은 1조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재정위원회 보고서) 2010년 12월 재정위원회의 재정건전화 방안에는 2015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2.3%로 줄이고, 2020년까지 재정적자를 4조달러 가량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

- 재량지출 삭감, 광범위한 조세개혁, 보건의료비용 인상억제, 기타 법정지출제도 개선, 사회보장제도 개혁, 예산 수립과정 개선의 6개 부문 개혁과제를 제시

※ 이 중 보건·의료제도 개혁, 기타 의무지출 제도 개선,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을 중심으로 정리

	주요 내용
보건·의료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장애자 의료보험의 경우, 의료수가 동결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성장률(SGR) 체제를 개편하여 비용 감축 ▪ 지역생활보조서비스지원법(the CLASS act)을 개혁하거나 폐지 ▪ 전체 의료보호 지출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다 장기적인 예산을 수립하고, 지출증가율을 GDP+1%로 제한
법정지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공무원과 군인의 의료 및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2020년까지 700억달러의 예산을 감축 ▪ 농업보조 프로그램의 순지출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00억달러 감축하되, 농업재해기금을 확충하고 농업위원회에 관련된 기금의 재조정을 허용 ▪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제도에서 입학시 소득에 기반한 보조금 제도를 없애고 졸업후 상황에 맞추어 학자금 상환 지원제도를 개선
사회보장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 공식을 보다 누진적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90/32/15%의 3개 구간 공식을 2050년까지 90/30/10/5%의 4개 구간 공식으로 변경하여 누진성을 강화 ▪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최저급여수준을 강화하여 빈곤 감축 ▪ 최고령자 및 장기지체부자유자에 대한 급여를 강화 ▪ 조기퇴직과 일반 퇴직연령을 기대수명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 2050년까지 최저과세기준을 임금의 90%선으로 인상 ▪ 개인연금저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개시

